

#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

### 당, 전주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김희옥 “호남 당세 상승하면 그것이 곧 정권 재창출”

새누리당이 3일 여당 불모지인 호남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적극적인 구애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호남 지역 선거인단과 당원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 후보자 5인, 최고위원 후보자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3인의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바야흐로 호남은 새누리당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지난 총선 참패 속에서도 호남에서 두 석을 얻는 기적을 이뤘다”라며 “이는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호남도 얼마든지 마음을 활짝 연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총무공 이순신의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인용하며 “저는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호남에서 당세가 상승하면 그것이 곧 정권 재창출을 뜻한다”라며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이 없다는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새누리당의 깃발을 굳건히 지켜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한 없는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특히 오랜 기간 땀 흘린 한을 풀어준 정운천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불모지나 다름 없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렵게 우리 새누리당을 이끌고 지켜오셨다”라며 “그런 가운데서 전남에 이어 이번엔 20년 만에 이 지



3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4차 전당대회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역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패거리를 이뤘다. 당원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호남 띄우기에 동참했다. 도당 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호남은 철옹성, 불모지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다. 바로 전주가 희망의 땅, 미래의 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이 지역장벽을 넘어 동서화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동서화합의 시대를 넘고 이 나라의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아까 김희옥 위원장이 말한대로 약무호남 새무새누리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느냐”고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인사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화합’, ‘소통’ 등의 문구가 새겨진 부채

를 흔들며 줄지어 입장했다. 디온 날씨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와이셔츠의 소매를 걷어치우고 연단에 올라왔다. 이날 체육관에는 후보자들의 지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주영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좌석을 차지했고, 이 정현 후보자 측은 ‘홀그라운드’ 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자들보다 다소 적은 지지자들이 보였다. /뉴스

## “내가 대통합의 용광로 역할 할 것”

### 이주영 의원, 새누리당 호남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동 연설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새누리당 자체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보다는 전북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특히 당대표 후보 기호 2번인 이주영 국회의원은 “뭉치는 새누리당, ‘통합입니까? 분열입니까?’ 등의 구호와 동시에 ‘대통합의 용광로 역할 이주영 본인’이라고 선언하면서 힘찬 당대표 경선에 칼을 췌다”고 포문을 외쳤다.

이주영 의원은 “‘친박도 비박도 없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정책중심으로 혁

신하겠음 ▲9번째 대선승리의 역사를 쓰겠음 ▲이순신 정신으로 답을 살리겠음 ▲국민과 함께 크게 하나되는 대박의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등의 4가지 공약을 외치면서 지지해줄 것 희망한다”고 연설했다. 이 의원 전주 방문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오토바이 클럽인 마다도로 회원 40여명의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 후보의 경력과 약력은 경남 창원(마산)출생으로 경기도 졸업, 서울대 법

학과 졸업, 사법고시 합격,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5선 국회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 전) 박근혜대통령 대선기획단장, 전) 여의도 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냈다. 이번 전당대회 일정은 1차 7월31일 참원, 2차 8월3일 전주, 3차 8월5일 대전, 4차 8월9일 서울 잠실체육관, 8월8일 일반당원 투표, 8월9일 대의원 투표로 이루어진다.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은 “32년전 광주 전남지역에서 개최했던 전당대회가 전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전북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정당 정치를 복원해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생발통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뉴스=장원명 기자

## 복지위 ‘추경’ 여야 한목소리 질타

여야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이번에 제출된 추경사업 10건을 보면 모두 사회복지사업이고 보건의료 사업은 한 건도 없다”며 “장관은 보건의료 문제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거리가 먼 분야라고 생각해서 추경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민생안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준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2016년 생계급여를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2,170억여원을 자체 삭감한 바가 있다”며 “복지위예결소속에서 수급자가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돼서 증액해야한다고 말했지만 논의 없이 왔다. 스스로 셀프 삭감을 한 다음에 추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셀프 삭감하고 증액해서 추경하는 것은 행정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싸우든지 해서 해결해야 한다. 복지부에 여러차례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 부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런 예산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예산은 편성한다기 보다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게 바른 표현이 아니냐”며 “작년에 만든 올해 예산 규모에서 이른바 조정계수라는걸 적용해서 삭감했다(추경)로 다시 증액시키겠다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천 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은 해결이 됐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다 해결됐다고 본다는 근거를 밝혀주지 바란다”고 지적했다. /뉴스

## 박재만 “새만금 산단 매립 군산항 준설토로 충분”

### “석탄 폐기물 투기장 만드는 것 용납할 수 없다… 전북도 대책 소상하게 밝혀야”

새만금 산업단지 3공구 매립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1)은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사업 농지가 바닷물을 빼면 되는 줄 알았지만 매립토 확보라던 난제에 봉착하게 됐다”며 “명색이 국책사업인데 7억㎡라는 어마어마한 매립토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든 성과를 내야하는 새만금 개발과 매립토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 공사, 쌓여있는 석탄재를 처리할 길 없는 중부발전, 무능한 전북도, 운송업체 브로커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음모가 3공구 대항개발”이라며 “역사와 후손에게 죄 짓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항개발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대항개발이라도 해서 새만금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라면 좀 더 많은 민간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두 번의 공모에서 지원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새만금개발청은 대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중부발전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미 계획된 군산항로 준설토를 이용하면 48개월만에 완공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땅을 만든

다는 명분으로 석탄 폐기물 투기장을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계획된 군산항 준설토로도 충분인데 왜 무엇 때문에 검증도 되지 않은 그것도 타 지역의 석탄재를 먼저 들여오려고 하느냐”면서 “준설토를 다 사용하더라도 매립재가 부족하다면 그때 검토 보는 게 순서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전북도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능하게 손을 놓고 제3차 대항개발이 폐기물 들어오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전북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이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장 큰 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명 기자

##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 이르면 4일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정안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4일이나 5일쯤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법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공수처법 제정안 세부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위반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최종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제정안에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의 경우 전현직 모두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대상에 넣기로 했다.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공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국회 재적의원 10

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수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자로 한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는 방안으로 조율했다. 처장은 추천위가 단수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퇴직 1년 미만의 전직 검사는 특별검사 임명을 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수처의 견제장치 수단으로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뉴스

## 국주영은, 전북중증장애인 단체 감사패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도내 중증장애인 권익옹호에 기여한 공로로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등 전북중증장애인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국주영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자 장애로 인해 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의 극복과 사회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모든 장애인들이 지역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주영은 의원은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발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을 쏟았다. /신광명 기자

## 더민주 도당 군산지역위 대의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 지역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군산지역위원회는 지난 1일 나운봉 소재 군산문화원(전 KBS방송국) 어린이극장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연직, 선출직 상무위원을 비롯하여 전군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그동안 20대 총선 이후 당연직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김운태 후보를 지역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운태 위원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도시관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사무국장은 강성욱 군산시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더민주군산 지역위원회는 노인, 여성, 청년, 노동, 직능, 장애인 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17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상무위원 68명과 전군대의원 59명을 각각 선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의 조직 구성을 발표했다. 앞으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등 새로운 당직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번 더민주군산 지역위원회의 조직 정비로 민주화운동과 호남의 뿌리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민주군산 지역위원회의 이번 조직 정비를 통해 2017년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루고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했다.

김운태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군산 지역위원회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오랜 역사의 정당의 위상을 되찾게 됐다”며 “불평등 심화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정당정책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발전하여 향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 유성엽 “우레탄 교체예산 추경 반영할 것”

국회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창)은 ‘발암 우레탄’ 교체 예산을 이번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현재 우레탄이 설치된 1,766 곳의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어 교체가 시급한데도,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총 예산 교체비용이 2,200억원으로 국가 1년 예산 386조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가 나서서 당장 시급한 학교 900곳의 운동장 교체비용 776억원 부터 이번 추경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근린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국 905 곳의 우레탄 설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우레탄 운동장 교체 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등 유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반복되는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시설은 49곳으로 조사됐다. /신광명 기자

## “정부, 대안도 없이 ‘청년수당’ 반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두고 국무위원과 설전이 있었던 것과 관련,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중앙정부는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마땅한 해법 제시 없이 그저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으나 대통령과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대통령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정책이 바로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책 실현을 위해 청년들과 2년간 토론했다”고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뉴스